

의안번호	제 2023 - 1호
보 고 연 월 일	2023. 2. 13. (제12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2
1.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개최	2
2.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결과	2
III. 2022년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	4
1. 개요	4
2. 행사 개요	4
3. 발표 및 토론 내용	5
4. 향후 계획	12
IV. 일본 사법부 방문 결과 보고	13
1. 방문 내용	13
2. 방문 일정	13
3. 방문 결과	13
V. 2023년도 상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4
1. 목표	14
2. 교육기간 및 장소	14
3. 교육과정	14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14
5. 교육내용	14

VI.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보고	15
1. 개요	15
2. 관련 규정	15
3. 의견수렴 계획	17
4. 시행 일정	20
 VII.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21
1. 개요	21
2. 사건 개요	21
3. 추진경과	21
4. 프로그램 홍보(‘당신이 판사입니다’)	22
5. 향후 계획(추가 제작)	22
6. 프로그램 체험 순서	22
 VIII.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28
1. 개요	28
2. 온라인 광고 (기간 : 2022. 12. 2. ~ 12. 15.)	28
3. 이벤트 시행	28
4. 이벤트 시행 성과 (양형체험 프로그램 접속횟수 상향)	30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1
1.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촉구 서명부 접수	31
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접수	31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31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34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52차	2022. 1. 16.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방안 검토(형종 선택 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II.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1.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2023. 1. 17. 11:00
- 장소: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참석자: 양형연구회 임원 및 회원

2.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결과

(1) 양형연구회 임원 선출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임원을 선출함

순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회장	이용식 명예교수 (서울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 (고려대 로스쿨)
2	상근부회장	손철우 상임위원	손철우 상임위원
3	부회장 (검사)	이근수 제주지검장 (前 양형위원)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
4	부회장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전현정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역임)
5	부회장 (교수)	이상수 교수 (서강대 로스쿨, 前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조은경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한국법심리학회 회장)
6	운영위원 겸 수석간사	한상규 교수 (아주대 로스쿨, 전문위원)	최승원 고법판사 (수석전문위원)
7	운영위원 겸 연구간사	박용철 교수 (서강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김정환 교수 (연세대 로스쿨)
8	운영위원 겸 편집간사	이도행 부장판사 (운영지원단장 역임)	송영복 판사 (운영지원단장 역임)
9	운영위원 겸 기획간사	범선윤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운영지원단장
10	운영위원 겸 수석간사	최승원 고법판사 (수석전문위원)	최준혁 교수 (인하대 로스쿨, 전문위원)

순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1	운영위원	김한울 대검 검찰연구관 (전문위원)	김한울 대검 검찰연구관 (전문위원)
12	운영위원	안성훈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	운영위원	강우예 교수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최호진 교수 (단국대 법학과)
14	운영위원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류부곤 교수 (경찰대 법학과)
15	운영위원	박미랑 교수 (한남대 경찰학과)	박천웅 교수 (전북대 사회학과, 한국법사회학회)
16	운영위원	최이문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이창민 교수 (한양대 경영대, 한국법경제학회)

(2) 양형연구회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 2023년도 양형연구회 정기 심포지엄 개최를 의결함
 -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실시
 - 구체적인 시기, 주제 등은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Ⅲ. 2022년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11. 28.(월)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2. 행사 개요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개회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 영상축사: Carlton W. Reeves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위원장,
William Davis 영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 기조연설: 천대엽 대법관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동안 양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주요 방안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논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 산업재해 등 법인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외국의 사법제도와 양형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

3. 발표 및 토론내용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승원 고법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 System)」라는 제목으로 발표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로 ①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②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재판실무의 정착, ③ 양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④ 양형이유의 충실한 설명을 통한 재판의 설득적 기능 제고, ⑤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의 반영을 들었음
- 양형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① 양형기준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 ② 집행유예 기준의 보완, ③ 양형기준 적용 현황의 지속적 분석과 양형기준의 수정, ④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수정, ⑤ 양형심리의 활성화, ⑥ 양형조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제시함

② Julian ROBERTS 교수가 「The Evolu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with a focus on England and Wales(영국을 중심으로 본 양형기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비교법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제의 발전 상황, 영국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과 성과, 영국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의 과제 소개
- 영국 사례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 : ① 양형위원회의 다수가 사

법부로 구성되어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판사들이 많이 관여하는 경우 양형기준은 사법부에 받아들여짐. ② 양형기준은 반드시 상당 수준의 사법적 재량을 허용해야 함. ③ 양형기준은 양형 결정의 투명성과 양형의 일관성을 향상시키지만, 실형률, 재범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③ Matthew KLEIMAN 부국장이 「Data as the Lifeblood of Sentencing Commissions(양형위원회의 필수요소: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

- 펜실베이니아 주 양형위원회의 데이터 기반 양형정책과 실무를 소개함. 성공적인 양형위원회는 양형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책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양형 정책과 실무’에 중점을 둔 객관적 기관이라고 강조함

- ④ 타노이 쿠라토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국 형사국원)가 「The Recent Trends of the Sentencing Practices in Japan(일본 양형실무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일본의 재판원 재판에서는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적정성,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양형 참고 시스템(Sentencing Reference System)을 구축하고, ② 양형 통계 그래프(Sentencing Graph)를 이용한다고 소개

- ⑤ Johannes KASPAR 교수가 「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Recent Trends in Germany(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 독일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 체계는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예측 가능성이 아닌 사법적 재량과 유연성에 중점을 둠
- ② 양형기준이나 양형위원회의 도입을 포함한 양형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결되었고,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독일에서 양형편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③ 독일 학계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속력 없는 연방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도입에는 불

투명성과 차별, 편향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많음

- ④ 사건으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실무자와 학자로 구성된 양형위원회가 독일에도 도입되어야 하고, 한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사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발표]

① Jörg KINZIG 교수가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in Germany(독일의 재범 위험성 판단)」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라 정해짐. 범죄전력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됨
- ②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역별로 상당한 양형 편차가 존재함. 그러나 양형기준제는 채택되지 않음
- ③ 법관의 판단을 조력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견해가 많음
- ④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그러나 이에 대한 몇몇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함

② Melissa HAMILTON 교수가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재범위험성의 객관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채택된 평가도구는 해당 지역의 실무 관행과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역 내의 인구에 적용하기에 유효적절하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이러한 재범위

협성 평가 결과는 그 자체로 특정한 중요성을 갖거나 권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고려할 증거의 하나임

- ② 재범위협성 평가도구는 사법시스템이 고위험의 사람들에게 수용 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③ 그러나 재범위협성 평가도구에 오류도 존재함.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 예측하도록 하는 편향을 경계해야 함. 예컨대, 고용과 교육 수준에는 인종 및 계층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음. 재범위협성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소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정신병, 연령, 지역, 젠더 등). 또한 재범위협성은 고정된 것이 아님

[지정토론]

① 권미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요지

- 독일과 달리 영미법 국가에서 위험성 평가도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① 영미법은 독일법과 달리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과 예방목적에 근거한 보안처분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형사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음. ② 미국은 독일에 비해 높은 범죄율과 이로 인해 과밀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컸음. ③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협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무죄 판단이 끝난 후 양형심리에서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임.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작성되는 판결전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
- 통계적 방식에 기초한 위험성 평가도구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중 하나인 것이지만 법관의 판단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법관으로서의 여전히 그 평가결과를 다른 요소와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결국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객관화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fairness)의 문제임

② 김도희 검사(광주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수사 단계에서도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②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여부, ③ 심신장애 상태,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필요함
- 검사가 수사 중 피의자의 '재범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R-L과 KORAS-G를 활용하여 결과를 회신하기도 함
- 독일 및 영미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형 집행 이후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하여 질의

③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현재 세계 대부분의 법률은 법관이 전문가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참고하도록 할 뿐이지, 전문가의 판단 결과에 구속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타당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 전문가의 평가가 법관의 평가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관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재범위험성이 판단되면 안 됨
- 재범위험성 판단 과정에서 검사나 법관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능력과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성에 대한 과대평가의 이유와 방지대책을 질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사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① Brandon GARRETT 교수가 「Lessons from Organizational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법인 범죄 양형이 주는

교훈)」라는 제목으로 발표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판사로 하여금 법인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사형 조항(corporate death penalty provision)'과 함께, ① 효과적인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② 자율 신고, 협조 또는 책임의 수용(self-reporting, cooperation o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을 통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을 채택
- 법인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미국 기소협상 실무는 법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 → 법인의 법규준수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중요함

② 김웅재 교수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해석론(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Doctrinal Analysis of Joint Penalty Provision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현행법상 법인 형사처벌의 실정법상 근거는 개별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양벌규정들인데,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음
- 현행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형사처벌의 규율방식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책임과 ② 대표자 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감독책임의 이원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음
-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양형에 있어서도 차별 취급할 것인지, 감독책임의 요소인 감독과실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함

[지정토론]

① 권보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해서는 법인 처벌 가능성을 무한정 열어 둘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영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큰 ‘중대사고형’에 집중함이 타당
- 형사절차에서 법인과 대표자를 동일시하게 되면 형사책임 성립(실체적 진실발견)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정의는 일정 정도 상대화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음. 대표자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사과 재판의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은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필요함
- 행위와 책임능력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는 법인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음. 형법총칙 등을 통하여 법인 처벌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수단이나 자연인 행위자 처벌로는 불충분한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효과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②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논쟁사항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양벌규정은 형사 정책적 의도에 의하여 개별 법률에서 특히 법인처벌을 목적으로 둔 예외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오늘날 법인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를 발현함. 이 경우 반드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행능력을 이원화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성이론으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과실 책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음. 결론적으로는 법인 고유의 조직형태를 인정하고 이사회 등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의사결정능력으로 보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위능력으로 보아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③ 김유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구성원의 개인 책임에 상응하지 않음.
또한 기업 활동에서 분업 및 아웃소싱은 일상적임 → 그렇다면 분업 및 아웃소싱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1인의 행위만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 이론이 기능하는지, 대표자의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만을 동일시 되는 법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문제됨
- 양벌규정의 법문언상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가중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면책사유) 법인은 자연인의 본죄의 형으로 처벌됨. 따라서 양형의 여지도 그런 만큼 좁다고 생각됨
- 그밖에 입증책임의 문제,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기소 혹은 유죄답변협상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기업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저조한 이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입증책임, 기업에 대한 벌금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등을 질의함

4.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결과를 양형기준 및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활용할 예정임
- 향후 비교법적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해외 양형위원회 및 해외 사법부와의 교류도 지속할 예정임

IV. 일본 사법부 방문 결과 보고

1. 방문 내용

- 방 문 자 : 김영란 위원장, 김혜정 위원,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22. 12. 13.(화) ~ 2022. 12. 17.(토) [4박 5일]
- 방문기관 : 일본 최고재판소, 법무성, 도쿄지방법재판소

2. 방문 일정

일 시	방문기관	내 용
12. 13.(화)	이동	김포 출발 → 하네다 도착
12. 14.(수)	준비	방문 및 면담준비, 현지 파견 판사 등 간담회
12. 15.(목)	최고재판소, 도쿄지방법재판소	기관방문
12. 16.(금)	법무성	기관방문
12. 17.(토)	이동	하네다 출발 → 김포 도착

3. 방문 결과

- 일본 최고재판소, 법무성 및 도쿄지방법재판소 측의 충실한 답변과 협조를 통해 스토킹범죄, 성범죄, 법인 형사처벌 등에 관한 비교법적 정보를 수집하고, 양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
-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기관 사이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됨

V. 2023년도 상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 목표

- 양형자료조사, 양형기준 운영점검 등 양형자료분석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
- 신규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지원

2. 교육기간 및 장소

- 교육기간
 - 2023. 1. 5.(목) ~ 2023. 1. 6.(금)
- 장소
 - 법원도서관 1층 다목적실 151호

3. 교육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18명): 통계분석과장, 양형자료분석관(15명), 통계분석과 실무관(2명)
- 강사(4명):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통계행정관, 이승철 분석관

5. 교육내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운영점검시스템 매뉴얼 안내 및 사용방법 실습

Ⅵ.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준수를 위한 절차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양형기준안의 공개)

위원회는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제1항 제2호(양형기준안 작성)의 양형기준안 및 설명서를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 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22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양형기준 정비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나. 관계기관 의견조희 대상기관 선정(안)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토 교 통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2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3	연구기관	대한범죄학회	사무국장
14		한국교정학회	사무국장
15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16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8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1		한국피해자학회	총무간사
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4	유관기관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
25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6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7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8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2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3	시 민 단 체	아 동 권 리 보 장 원	정책연구팀장
34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35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36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9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0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1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2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3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4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 법 무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6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19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0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6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7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2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3. 2. 17. ~ 3. 20.

○ 의견조회 취합 : 2023. 3. 20.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II.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1. 개요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체험 프로그램임
- 기존에 제작된 범죄군(살인, 절도, 사기, 강제추행, 도주치상, 공무집행 방해, 상해, 방화)에 체험 대상 다양화라는 체험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2022년도에는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콘텐츠[횡령, 마약범죄]를 제작
 - 사업명: 2022년 국민 양형체험 동영상 제작
 - 사업기간: 2022. 3.경 ~ 2022 12.경 (약 9개월)

2. 사건 개요

- 횡령 범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건
- 마약 범죄: 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항공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1,890g의 대마초를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

3. 추진경과

- 2022. 3. ~ 4. 추가 콘텐츠 범죄군 선정(횡령, 마약)
- 2022. 4. ~ 7.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2. 7. ~ 8. 시나리오 작업 및 촬영
- 2022. 9 ~ 11. 편집 작업
- 2022. 12. 2. 횡령, 마약범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4. 프로그램 홍보(“당신이 판사입니다”)

- 프로그램을 알리는 영상광고(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배너(카카오, 네이버, 구글) 광고 병행 집행

5. 향후 계획(추가 제작)

-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 나은 품질의 추가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
- 국민적 관심도 및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을 선정

6. 프로그램 체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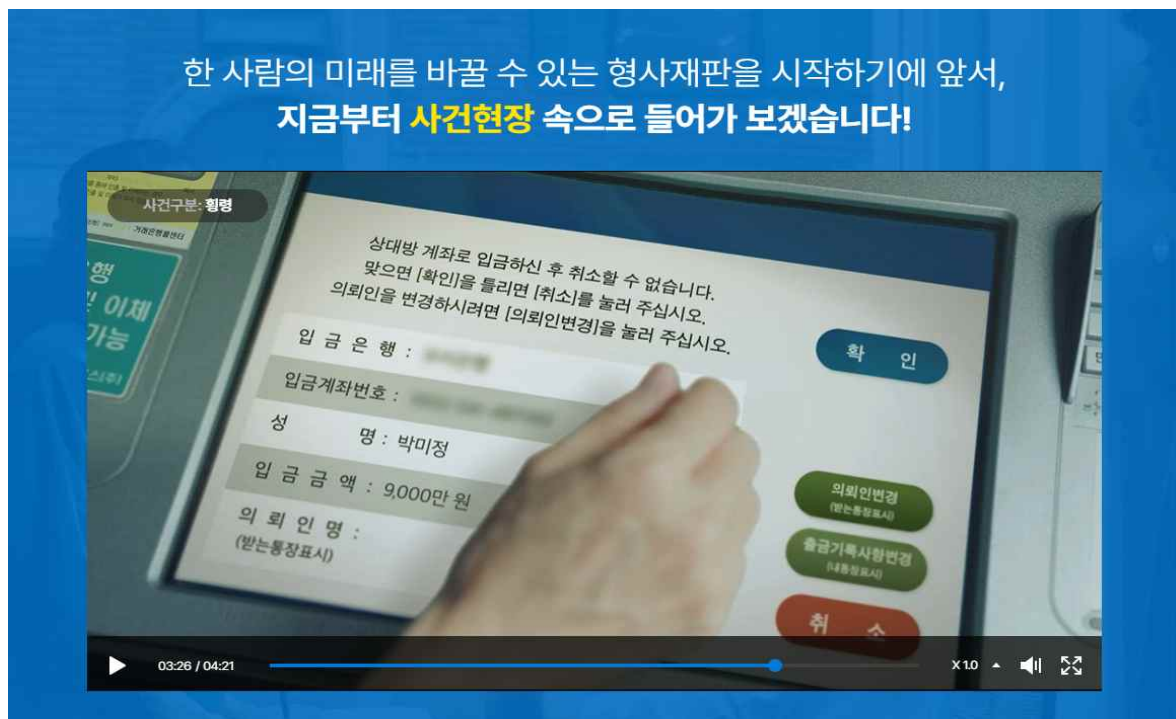
(1) 사건 선택



(2) 체험 전 형량 선택




(3) 사건 영상




(4) 법정공방 영상

법정공방


사건구분: 횡령




피고인은 2017년 7월 26일경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인 조카를 찾아가




법정공방



검사 최홍익건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5) 양형자료 조사

보다 적절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보낸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인하고 선고에 참고하세요.

합의서

탄원서

합의서

<피해자> 성명 : 박수민


<피고인> 성명 : 박미정

위 피해자의 2017년 7월 8일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72,20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상호 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2020년 5월 17일

피해자 : 박수민



피고인 : 박미정



(6) 선고형 결정

피고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선고/인자선택
실문문항

형법 제355조 제1항(형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0년 + -

징역형의 범위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는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42조)

벌금 0만원 + -

벌금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이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집행유예 0년 + -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가 당신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양형기준방향 >

양형안따로 보기 >

- ☐ 가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가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가중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감경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 감경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선고/인자선택
실문문항

체험자 동계를 위한
실문에 참여해 주세요.
보다 합리적인 양형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험 전/후 선택 형량에 변경이
있었다면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
까?
(* 중복선택 가능)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 ☐ 20세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 이상

직업군 ☐ 학생 ☐ 기업인·경영 ☐ 사무·기술
 ☐ 판매·서비스 ☐ 자영업자 ☐ 생산·기능·노무
 ☐ 가사 ☐ 법조인 ☐ 기타

☐ 사건영상 ☐ 법정공방 ☐ 법률조항

☐ 양형기준

(7) 실제 사건의 판결 결과 확인

판결결과



실제 판결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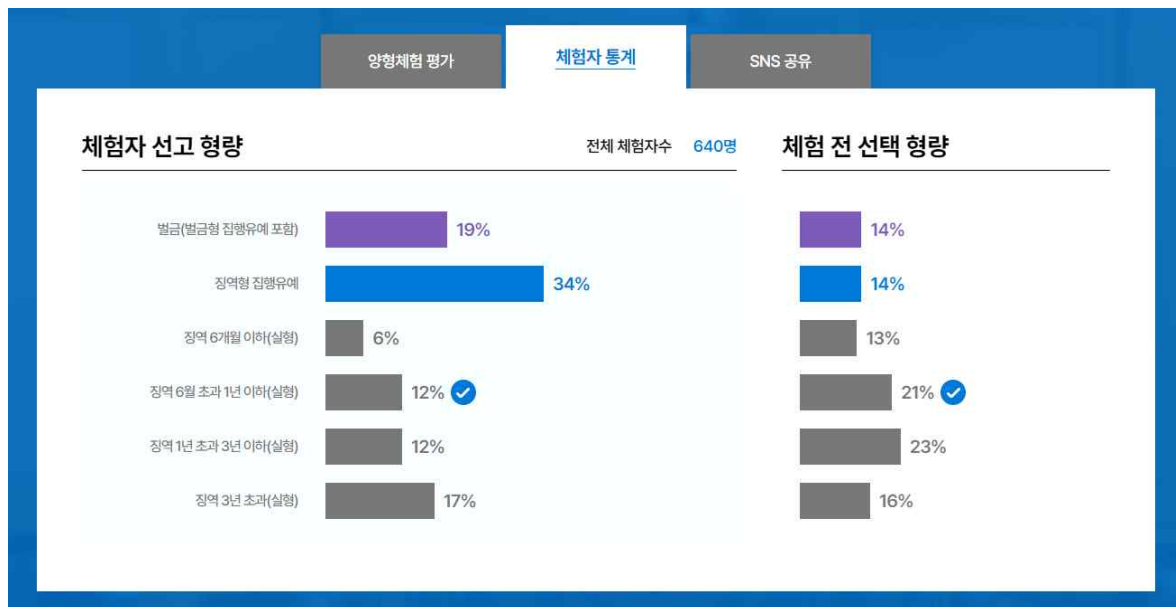
체험 전 선택 형량

징역 6월 초과 1년 이하(실형)

체험자 선고 형량

징역 10월

(8) 통계 확인



VIII.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1. 개요

-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2개의 사건(횡령 범죄, 마약 범죄)이 추가됨에 따라 SNS 등 온라인 광고 집행을 통해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양형체험 프로그램 접속률을 높이하고자 함

2. 온라인 광고 (기간 : 2022. 12. 2. ~ 12. 15)

- 광고 매체
 - 영상광고(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배너광고(카카오, 네이버, 구글)
- 광고 방법
 - 영상광고
 - 유튜브 : 트루뷰 인스트림 - 다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광고 영상을 노출하는 광고 방식, 영상에 링크 노출도 가능함
 - 인스타그램 : 영상 - 영상과 링크가 함께 노출되어 홈페이지로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광고 방식
 - 배너광고
 -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홈페이지 메인 등 주요 모바일 페이지 접속 시 상단 배너에 광고가 노출되어 배너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광고 방식
 - 구글: 구글 광고를 활용하는 홈페이지의 해당 영역에 배너가 노출되도록 하여 배너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광고 방식

3. 이벤트 시행

- 2022. 12. 2. 대법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계정을 이용하여 이벤트 게시

<p>1</p> <p>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p> <h1>당신이 판사입니다</h1> <p>횡령 범죄 마약 범죄 추가 오픈 이벤트!</p> <p>2022.12.2.~2022.12.15.</p> 	<p>2</p> <p>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p> <h2>'당신이 판사입니다'는?</h2> <p>국민이 직접 판사의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p> <p>10가지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해 보세요.</p>
<p>3</p> <h2>이벤트 참여 방법</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끝까지 체험하기 3. 마지막 단계에서 양형체험 프로그램 평점/의견 작성 칸에 응모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를 넣는다. 4. 평점/의견 보내기 누르면 응모 완료! 	<p>4</p> <p>응모자 중 추천하여 접이식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2종 중 랜덤 발송)</p>  <p>3단 자동우산 5단 플트케이스 수동 우산</p> <p>응모기간 2022. 12. 2.(금) ~ 2022. 12. 15.(목)</p> <p>당첨자 발표 2023. 1. 6.(금) 대법원 SNS 및 당첨자 개별 공지</p> <p>* 중복응모는 가능하지만 중복당첨은 되지 않습니다.</p>

○ 기간 : 2022. 12. 2. ~ 2022. 12. 15.

○ 기념품 : 접이식 우산

○ 당첨자 발표(121명) : 2023. 1. 6.(금) 대법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계정 및 개별 공지

4. 이벤트 시행 성과 (양형체험 프로그램 접속 횟수 상향)

구분	광고 집행 전 (2022. 11. 2. ~ 12. 01.)		광고 집행 후 (2022. 12. 02. ~ 12. 31.)	
	접속자 수	체험 완료자 수	접속자 수	체험 완료자 수
10개 범죄 총합	8,120	5,149	11,391	6,215
기존 8개 범죄	8,120	5,149	7,920	4,319
신규 2개 범죄	—	—	3,471	1,896

— 신규 2개 범죄(횡령범죄, 마약범죄)는 2022. 12. 2. 신규 오픈함

※ 2022. 12. 31. 기준 전체 체험자는 457,320명, 끝까지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305,519명임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촉구 서명부 접수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양형기준 수립으로 강력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동물권행동 카라의 서명부 제출
 -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 2,708인 명의 서명부 별도 보관

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접수

- 2022년 12월 초순경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 현재의 처벌형량이 제2, 제3의 비극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중하게 처벌하여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
 - 피해자 아버지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탄원서) 및 시민 참여 탄원서 (10,000여 건) 별도 보관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1. 10.까지 총 64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10. 20. ~2022. 12. 2.(32)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요청
2	2022. 10. 28. ~2022. 12. 2.(28)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3	2022. 11. 14. ~2022. 12. 2.(3)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요청
4	2022. 12. 8.(1)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에 특정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동물학대범죄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3. 1. 10.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2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 요지
1	2022. 12. 6. ~ 2023. 1. 10.(2)	○ 양형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2	2022. 12. 9. ~ 2023. 1. 10.(6)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3	2022. 12. 15. ~ 2023. 1. 10.(3)	○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4	2023. 1. 1.(1)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건 관련 양형 의견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3. 1. 10.까지 총 5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 요지
1	2022. 11. 13.(1)	○소년범에 대한 엄벌 요청
2	2022. 11. 15.(1)	○특정사건 엄벌 요청
3	2022. 11. 15.(1)	○자국민과 외국인 범죄자와의 판결의 형평성 요청
4	2022. 11. 21.(1)	○특정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5	2022. 12. 9.(1)	○소액사기 사건의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의견

- 1번,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특정 사건에서의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폭행치사죄 처벌 강화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

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과 그 집행에 관련한 부분은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1. 10.까지 총 3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12. 27.(1)	○ 개별사건 양형에 대한 불만
2	2023. 1. 4.(1)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개선 의견
3	2023. 1. 5.(1)	○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